

KCGS Report

제14권 2호 | 통권 제170호
2024.2.



한국ESG기준원

KCGS Report 제14권 2호

발행일: 2024년 2월 29일

발행인: 심인숙

발행처: 한국ESG기준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TEL: 02-3775-3339 www.cgs.or.kr

제작: 경성문화사 02-786-2999

등록NO: 영등포, 라00532

※ 이 보고서의 견해 및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한국ESG기준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또한, 해당 보고서의 저작권은 한국ESG기준원에 귀속되며, 보고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복제, 송신, 출판, 재배포하거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상기 저작물을 무단 도용하거나 취득한 정보를 임의 가공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해당 보고서 인용시 반드시 출처를 표시 바랍니다.

KCGS Report

제14권 2호 | 2024. 2.

ESG 동향

KOSPI100 이사회 의 실질적 독립성 수준 분석	2
국내 주요 상장기업의 지속가능성 위험 및 기회 관련 공시 현황과 개선 필요사항	8

Global News

1. 국제지속가능성인증기준 5000(ISSA 5000) 초안에 대한 의견 제출 현황과 시사점	17
2. EU 이사회, 강제노동 결부상품 역내 진출 금지 법안 채택	20

KOSPI100 이사회의 실질적 독립성 수준 분석

박나온*

- ▶ KOSPI100 기업 사외이사들의 실질적 독립성 수준을 살펴봄
- ▶ 실질적인 독립성 지표를 '학연'을 통해 측정한 결과, 국내 기업의 표면적 독립성 수준과 실질적인 독립성 수준이 차이가 있음을 확인함
- ▶ 절반의 기업이 최소 1인 이상을 지배주주 또는 대표이사과 동문 사이인 사외이사를 선임한 것으로 나타남

검토 배경

- 이사회 구성 관련 국내 상법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교해도 엄격한 수준으로(〈표1〉), 국내 유가증권 시장 상장 기업들의 이사회는 외적으로 일정 수준의 독립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됨

〈표 1〉 OECD 국가들의 사외이사 선임 의무/권고 사항*

국가	최소 인원		최소 비율		
	1인	2-3인	20-25%	30-49%	50% 이상
칠레		캐나다 코스타리카 그리스 홍콩 이스라엘 한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사우디 스페인 터키	콜롬비아 멕시코	그리스 홍콩 인도 이스라엘 말레이시아 페루 사우디 싱가포르 터키	호주 캐나다 인도 아일랜드 이스라엘 한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남아공 스웨덴 영국 미국

*기울임체로 표기된 국가들의 경우 권고사항으로 상법 의무 사항 아님

* 본고의 견해와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한국ESG기준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한국ESG기준원 ESG평가실 지배구조파트 선임연구원(파트장), naon@cgs.or.kr

〈참고〉 사외이사 선임 의무 사항¹⁾

1.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 자산 5조 원 이상 비상장사, 금융지주 및 은행: 사외이사 3인 이상 & 이사 총수의 과반수
2. 자산총액 2조 원 미만 상장사, 자산 3천억 이상~5조 원 미만 비상장사: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
3. 자산총액 1천억 원 미만인 코스닥 상장 벤처기업 및 부동산투자회사: 선임 의무 없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이를 기반으로 한 이사회의 견제 역할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²⁾
 - Kim(2007)³⁾ 은 국내 대기업을 대상으로 사외이사 비율과 기업 성과 간 관계를 연구하는 것에 대한 무용론을 제기함
 - 김상훈, 김양민(2008)⁴⁾은 최고경영자와 사외이사 간의 사회적 유대관계는 한국의 문화적 측면을 고려할 때 이사회의 구조적 독립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함
- 최고경영자와 이사 간의 실질적 관계 측정 방법으로는 Social Network Index(SNI)가 있는데, ① 현재 함께 일하는지 ② 과거에 함께 일한 적 있는지 ③ 같은 학교를 나왔는지 ④ 업무 이외에 같은 조직에 속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임⁵⁾
- 국내 기업의 경우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 '학연'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Moon and Kim, 2000⁶⁾), 본 고에서는 '학연'을 통해 사외이사의 실질적인 독립성 수준을 측정해 보고자 함
- 이를 위해 표면적인 독립성의 수준을 S&P500⁷⁾ 기업과 비교하여 알아본 후, 실질적인 독립성 수준과 비교할 예정임

1) 상법 제542조의 9(사외이사의 선임)

2) 100대 기업 사외이사 반대표 0.4%분, 조선일보, 2024.01.24

3) Kim, Y. (2007). The proportion and social capital of outside directors and their impacts on firm value: Evidence from Korea. Corporate Governance: An International Review, 15(6), 1168-1176.

4) 김상훈, & 김양민. (2008). 이사회와 최고 경영층의 관계적 요인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전략경영연구, 11(1), 43-63.

5) Fracassi, C., & Tate, G. (2012). External networking and internal firm governance. The Journal of finance, 67(1), 153-194.

6) Moon.H.K and Y.M.Kim(2000), Ties between Corporate Ownership and Outside Directors,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f Networks and Organization, Seoul, Korea

7)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미국의 Standard and Poors에서 우량기업주를 중심으로 산정한 주가 지수

검토 대상

- 2022년 기준 KOSPI100⁸⁾ 기업의 등기 이사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함
 - DART 사업보고서 및 주주총회소집공고, FnGuide DB로 1차 정보를 수집함
 - 포털 프로필, 기사 등을 통해 이사의 약력과 이해관계 관련 추가 정보를 보완함

표면적 독립성

- ‘표면적 독립성’으로 ① 전체 이사 대비 사외이사 비율 및 ②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 여부를 확인함
 - (국내 기업의 사외이사 비율) 전체 이사 수는 평균 7.8명이며, 사외이사 수는 평균 5인, 사외이사 비율은 평균 62.8%로, 지수 구성 기업 대부분이 자산 2조원 이상⁹⁾이기에 상장사 평균에 비해 이사회 규모가 크고 사외이사 비율도 높은 편임
 - (S&P500 기업의 사외이사 비율) 평균적으로 전체 이사 수는 10인 이상이며 사외이사 비율은 86%로, 국내 기업에 비해 약 2.2명 많았고, 사외이사 비율은 약 24%p 높았음

〈표 2〉 KOSPI100 및 S&P500¹⁰⁾ 기업 사외이사 현황

기업 구분	전체 이사 수 평균 (명)		사외이사 수 평균 (명)		사외이사 비율 평균 (%)	
	KOSPI100	S&P500	KOSPI100	S&P500	KOSPI100	S&P500
일반 상장사	7.8	10.8	4.6	-	58.1	86
금융사	7.7		5.4		67.8	
전체	7.8	10.8	5.0	-	62.8	86

- (국내 기업의 이사회 의장 분리 여부)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인 경우가 66%에 달했으며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 경우는 34%였음
- (S&P500 기업의 이사회 의장 분리 여부) 국내 기업과 유사하게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한 경우가 약 66%였으며 분리된 경우는 20%에 그쳐 국내 기업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남

8) 코스피 200 구성종목 중 시가총액이 큰 상위 100종목으로 구성되어 2000년 3월 2일부터 산출되고 있으며, 코스피 100 지수는 코스피 200 지수의 선정기준(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보통주 중 시장대표성, 산업대표성, 유동성 등 기준으로 선정된 200 종목)을 통과한 종목 중 다시 시가총액 상위의 우량종목으로 구성(출처: 한국거래소)

9) 100사 중 94사가 자산 2조원 이상

10) EY Center for Board Matters, 23.09.30, Ernst & Young US

〈표 3〉 KOSPI100 기업 이사회 의장 현황

이사회 의장 분리 여부	KOSPI100 (%)	S&P500 (%) ¹¹⁾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	49	44
대표이사가 아닌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	17	-12)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	34	20
총계	100	-

- KOSPI100 기업은 S&P500 기업에 비해 이사회 규모가 작고 사외이사 비율이 낮았으나, 두 그룹 모두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가 절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유사하였음

실질적 독립성

- 국내 기업 사외이사들의 실질적 독립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이사회 구성원들의 출신 대학교 및 대학원을 정리함
- (분석 방법) 699명의 이사를 대상으로¹³⁾ (1) 지배주주가 있는 기업은 지배주주(동일인) 및 대표이사의 학력을, (2) 지배주주가 없는 기업은 대표이사의 대학교 및 대학원 학력을 확인하고 (3) 사외이사들과 같은 학교 출신인지 살펴봄
 - (이사들의 출신 대학¹⁴⁾) 이사들의 출신 대학은 서울대(172명), 연세대(72명), 고려대(67명), 하버드대(20명), 카이스트(20명) 순이었음

〈표 4〉 KOSPI100 기업 이사 출신 대학 현황¹⁵⁾

대학명	이사수(명)	대학명	이사수(명)
서울대	172	경북대	8
연세대	72	펜실베니아대	8
고려대	67	조지워싱턴대	8
하버드대	20	컬럼비아대	8
카이스트	20	한국외대	7
중앙대	17	인하대	7
성균관대	14	경희대	6
일리노이대	14	예일대	6
스탠퍼드대	13	텍사스오스틴대	6
서강대	12	UC버클리	6

11) Board Leadership and Structure: As Responsibilities Increase, US Corporate Boards are Taking a Fresh Look at Their Committees, 23.12.07, The Conference Board

12)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인 경우,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 경우만 수치로 제시되어있어 미기재

13) 기타비상무이사, 외국인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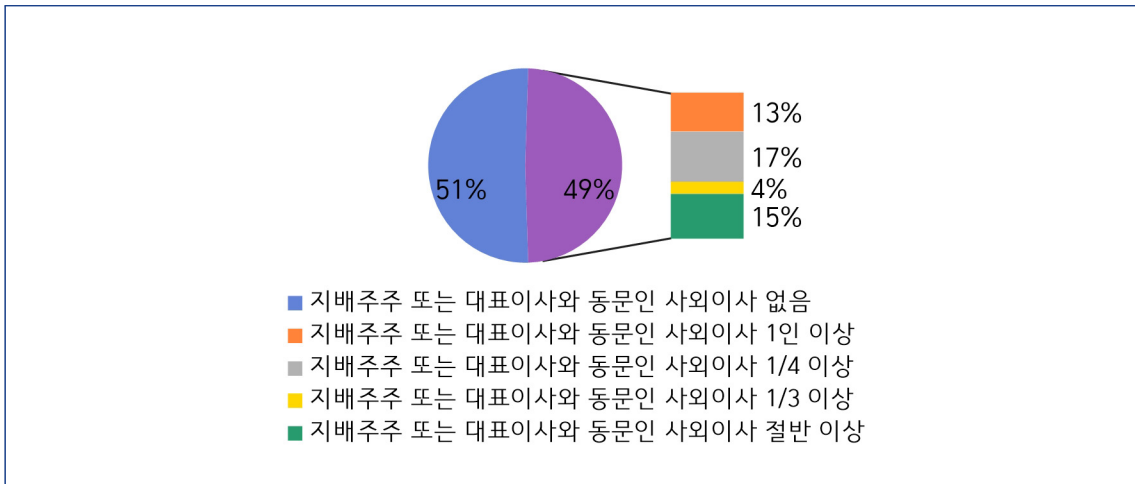
14) 대학교 및 대학원 각각 포함

15) 이사 수 기준 상위 20개 대학 표기

□ (분석 결과)

- (지배주주 또는 대표이사와의 동문 여부) 전체 사외이사 중 지배주주 또는 대표이사과 같은 대학 출신인 사외이사는 각 회사별 평균 0.73명이었고, 기업 중 약 절반 정도는 지배주주 또는 대표이사과 동문인 사외이사를 선임한 것으로 나타남
- (지배주주 또는 대표이사과의 동문인 사외이사 현황) 지배주주 또는 대표이사과 동문인 사외이사를 선임한 기업 중 약 15%는 사외이사 중 절반 이상이 지배주주 또는 대표이사과 동문이었음
 - 36%는 4분의 1 이상의 사외이사가 지배주주 또는 대표이사과 동문이었으며, 전체 사외이사과 지배주주 또는 대표이사과 동문인 경우도 1사 있었음

〈그림 1〉 KOSPI100 기업 지배주주 또는 대표이사과 동일 대학 출신 사외이사 유무



- (이사 간 동문 현황) 이사회 내 사내·사외이사 들 간의 학력이 중복되는 기업은 67사에 달했으며 평균적으로 이사회 내 2인 이상인 학교 수가 최소 1개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이사회 내부에서 사외이사과 동문을 추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정됨
- (실질적 독립성을 지닌 사외이사 비율) 학연으로 이어진 사외이사를 제외하고 ‘독립적인 사외이사’ 비율을 산출한 결과, ‘독립적인 사외이사’는 전체 사외이사 수 보다 약 1.2명 적은 평균 3.8명이었으며 전체 사외이사 비율에 비해 약 13.5% 낮은 49.2%로 나타남

〈표 5〉 KOSPI100 표면적인 사외이사 수와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사외이사 수 비교

기업 구분	전체 이사 수 평균 (명)		사외이사 수 평균 (명)		사외이사 비율 평균 (%)	
	공식	실질	공식	실질	공식	실질
전체	7.8		5.0	3.8	62.8	49.2

결론

- 본 고에서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① S&P500 기업과 비교하여 표면적인 독립성 수준을 확인하고 ② 실질적인 독립성을 지배주주와 대표이사와의 동문 여부를 통해 재산출함
- 학연, 지연, 혈연으로 대표되는 ‘비공식적 네트워크’ 중, ‘출신 학교에 따라 연결된 인연’으로 정의되는 ‘학연’을 살펴보았으며, 분석 결과 국내 기업 이사회에 학연으로 이어진 이사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초, 중, 고등학교로 확대하게 되면 실질적 독립성의 수준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
 - 본 분석은 ‘같은 학교를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지인’이거나 ‘편향’되었을 것이라고 전제했다는 한계점을 지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 기업 이사회 의 거수기 문화는 지속되고 있어 표면적으로 보이는 이사회 의 독립성과 실질적인 독립성의 수준의 괴리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 국내 대기업 이사회 전체 안건 대비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 수는 약 0.69%¹⁶⁾에 불과함
 - 유가증권 상장 기업 중 사외이사가 반대 또는 수정 의견을 제시한 경우가 있는 기업은 약 8%¹⁷⁾에 그침
- 국내 기업들은 보여주기식 독립성이 아닌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하여 이사회 의 견제 역할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16)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 2023.01.24., 공정거래위원회

17) KCGS 지배구조 평가 결과

ESG 동향

국내 주요 상장기업의 지속가능성 위험 및 기회 관련 공시 현황과 개선 필요사항

정승연*

- ▶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의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발표되면서 지속가능성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공시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임
- ▶ 국내 주요 상장기업들은 지속가능성 위험 및 기회의 공시 수단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내 중요성(또는 중대성) 평가를 활용하고 있음
- ▶ 중요성(또는 중대성) 평가 결과를 지속가능성 위험 및 기회 공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위험 및 기회 요인이 선정된 이유와 사업모형 및 가치사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충분한 질적, 양적 근거를 동반하여야 함

배경

-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의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발표됨에 따라, IFRS S1(일반 요구사항)의 주요 보고사항인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국내 주요 상장기업¹⁾의 정보공개 현황²⁾을 검토함
- 국내에서도 ISSB가 발표한 공시기준을 바탕으로 한국형 ESG 공시기준안을 수립 중이며, 빠르면 2026년 이후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상장기업부터 단계적으로 ESG 공시가 의무화될 예정임³⁾
- 이에 지속가능성 위험 및 기회 공시 우수 사례와 IFRS S1 기준의 세부 내용을 바탕으로 공시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정보공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본고의 견해와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한국ESG기준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한국ESG기준원 ESG평가실 선임연구원(파트장), syjeong@cgs.or.kr

1) 시가총액 기준 상위 50대 기업

2) 보고기간 2022.01.01.~2022.12.31.에 해당하는 정보 기준

3) 한겨레, 2023, "ESG 공시 의무화 2026년 이후로 연기...“기업 요청 고려”

ISSB 및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소개

- IFRS(국제회계기준)재단은 국제 표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제정하기 위해 2021년 11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ISSB)를 설립함
- ISSB는 2023년 6월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으로 'IFRS S1 일반 요구사항'과 'IFRS S2 기후 관련 공시'를 공표함
- IFRS S1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이하 IFRS S1)의 목적은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주요 이용자가 기업에 대한 자원 제공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기업이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임

IFRS S1(일반 요구사항) 중 '위험 및 기회' 요구사항 소개

- IFRS S1 기준에 따르면 기업은 1)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2) 해당 위험 및 기회가 사업모형과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 3) 해당 위험 및 기회에 대한 대응계획과 진척도, 4) 해당 위험 및 기회가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시하여야 함
 - 재무적 영향에 대한 양적 정보의 경우 영향을 별도로 식별할 수 없거나, 측정불확실성의 수준이 너무 높아 산출되는 양적 정보가 유용하지 않을 경우 제공할 필요는 없으나, 이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야 함
 - 회복력의 경우 모든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에 대해 공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아님에 따라 조사 내용에서 제외하였음
- 이 외에도 IFRS S1 기준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세부 적용 지침을 통해 외부 환경의 일반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기업 특유의 요인을 포함한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하고,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의 범위를 재평가할 것을 요구함⁴⁾

국내 주요 상장기업의 '위험 및 기회' 관련 정보공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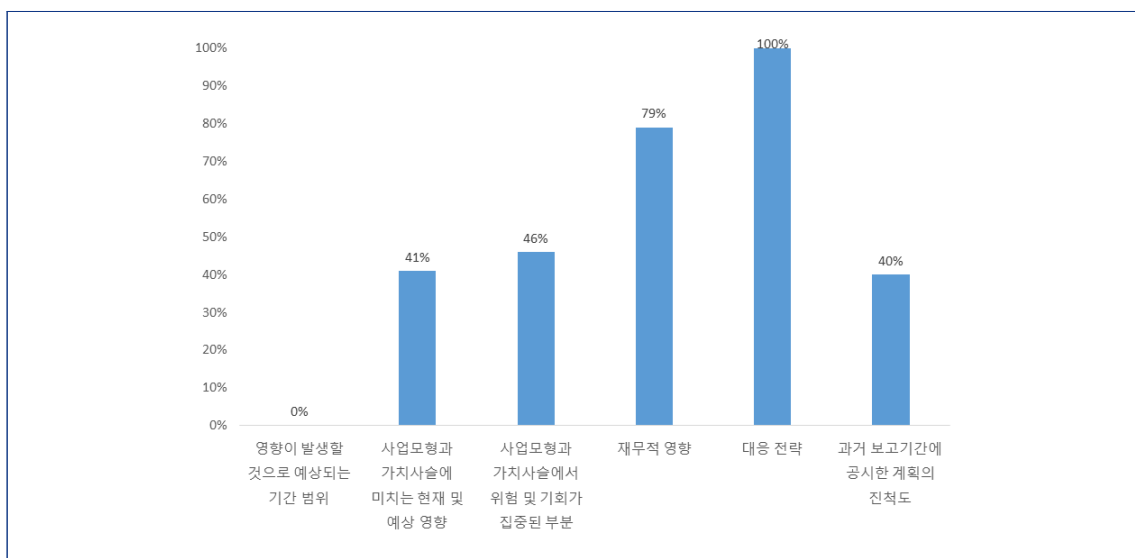
- 시가총액 기준 상위 50개 기업의 약 86%는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공시 채널로 지속가능 경영보고서⁵⁾를 발간하고 있으나, 조사 대상 기업 중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지속가능성 위험 및 기회'를 별도의 보고 내용으로 구성하여 공개하는 사례는 없었음

4)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2023.12.,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S1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 번역본

5) 기업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성과를 보고하는 모든 보고서를 의미하며 ESG 보고서, 지속가능성보고서, 통합보고서 등 다양한 명칭의 보고서를 포함

- 일부 기업의 경우 리스크 관리에 관한 보고 페이지를 통해 주요 비재무 리스크와 대응 현황을 공개한 사례가 있음
- 다만,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은 보고서에 공개할 이슈를 선정하기 위해 ‘중요성 (또는 중대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중요성(또는 중대성) 평가 과정에서 도출된 이슈는 기업 내·외부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요소와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 요소를 식별하여 우선순위화한 결과임에 따라 IFRS S1 기준에서 요구하는 지속가능성 위험 및 기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국내 주요 상장기업 중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전체 기업은 중요성 평가 결과를 통해 위험 및 기회 요인을 식별하여 보고하고 있으며, IFRS S1 기준에서 요구하는 각 사항을 보고하고 있는 기업의 현황은 <그림 1>과 같음
 - 지속가능성 위험 및 기회의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범위에 대한 설명을 기재한 경우는 없음
 - 사업모형과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하지 않고 중요성(또는 중대성) 평가 결과를 통해 도출된 이슈만을 나열하는 경우가 다수에 해당하였음
 - 사업모형과 가치사슬에서 위험 및 기회가 집중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 및 기회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해관계자를 공개하는 방식을 채택함
 - 재무적 영향과 관련하여서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인 재무 지표와 예상되는 영향의 양적 정보가 아닌, 영향의 정도를 상·중·하로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이 공통된 특징임
 - 대응방안과 계획, 이를 근거로 설정한 목표, 목표 대비 이행 성과를 모두 공시하지 않고 일부만을 공시하여 위험 및 기회의 전반적인 관리 흐름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다수임

<그림 1> IFRS S1의 ‘지속가능성 위험 및 기회’ 요구사항 보고 현황





지속가능성 위험 및 기회 공시 우수 사례

- 현재 시점에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ESG 공시 의무화는 2026년 이후 예정인 것 외에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기 전임에 따라 기업이 반드시 IFRS S1 기준에 따라 공시를 해야 할 의무는 없음
- 그럼에도 일부 기업에서는 ESG 공시 의무화를 대비하여 IFRS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중 일부의 내용을 포함하여 지속가능성 위험 및 기회 정보를 공개하고 있음
- 사례로 제시된 기업은 중요성(또는 중대성) 평가를 통해 회사의 주요 위험 및 기회 요인을 도출하고 위험 및 기회가 사업영역 및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 해당 영향의 정도, 위험 및 기회 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전략과 목표, 이행 실적 등을 공개함
- 특히 회사의 지속가능성 위험 및 기회 관리 체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분하여 공시하여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 중요한 정보가 식별될 수 있도록 함
 - SK텔레콤은 중대 이슈가 위험 및 기회 요인으로서 사업모형에 미치는 현재의 영향과 미래에 예상되는 영향을 비즈니스 사례를 통해 상세히 공개하고 있으며, 위험 및 기회 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과 현재까지의 진척도를 공시하는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공개함⁶⁾ (<그림 2> 참조)

6) SK텔레콤, 2023, Annual Report 2022

〈그림 2〉 SK텔레콤 중대 이슈 분석 중 일부

중대 이슈	위험/기회 식별	1 비즈니스 사례	사업 영향	사업 전략(대응 방향)	2 중장기 계획(목표 연도)	3 핵심 성과(현황)
1 기후 변화 대응 (탄소중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RCP 시나리오 기반 산불, 산사태, 폭우 등 기후변화의 물리적 리스크 분석 'SKT 기후변화의 물리적 리스크 지도'를 구축 및 대응 전략 수립 SSP 시나리오 기반 분석을 통한 다양한 사회/경제 변화 영향 검토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자국 등 주요 Infra 운영 비용 증대 및 가격 경쟁력 저해 가능 자연재해 발생 시 전국 유무선 통신시설/장비 손실 (훼손)으로 인한 통신 마비 (네트워크 장애) 발생 가능 기후변화 관련 규제 강화 및 탄소 거래가격 지속 증가 추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Cost Risk 	<p>[Net Zero를 위한 3대 Green 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Green Operation: 전력 사용량 25% 감축 노후 장비 교체 싱글랜(Single LAN) 자사망 도입을 확대 AI 기반 첨단 냉방/저전력 설계 솔루션 적용 확대 Green Energy: 재생에너지 100% 적용 사옥·통신국사 태양광 자가 발전 PPA-REC 구매로 재생에너지 적용 Green Forest: 잔여 온실가스 배출분 상쇄 산림 탄소상쇄제도 통해 직접배출 온실가스 상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실가스 (By 2030) 47.7% 감축* (By 2050) 넷제로 달성 * 2020년 대비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 (By 2030) 65% 달성 (By 2050) 100% 달성 국내외 탄소배출권 확보 (By2030) 239만톤 	<p>[Green 전략 기반 Net-Zero 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Green Operation) 사옥: 고효율 장비 교체 1,895tCO₂e 절감 통신장비: 싱글랜 사업, Power Saving, 5G 공동망, 고효율 장비 교체 127,422tCO₂e 절감 (Green Energy) 사옥: 녹색 프리미엄 55,175tCO₂e 절감, 태양광 발전 511tCO₂e 절감 통신장비: 태양광 발전 1,078tCO₂e 절감 (Green Forest) 외부사업 산림 훼손 방지 규모 2,420,627그루
2 AI 기반 Core Biz 재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MNO, 미디어, 구독 등 핵심 사업 AI로 재편을 통한 AI & Digital Infra 서비스 컴퍼니로 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5G 서비스망 구축을 위한 투자 비용 손실 발생 가능 신규 AI/ICT 기반 서비스 확대를 위한 신성장동력 지속 개발/발굴을 위한 인적/재무적 자본 투입 비용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Cost Revenue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최대 5G 커버리지 및 속도 초격차 등 차별화 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개발 밸류체인 전반의 AI 전환을 통한 시간과 공간을 확장 한 초연결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By 2025) 매출* 23조 이상 달성 *연결기준 	<p>[유무선 통신 디지털 전환] 5G 누적 고객 1,300만명 돌파</p> <p>[미디어]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협력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SK스토아 T커머스 시장 매출 기준 1위 유지 <p>[Enterprise]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등 기업 생산성 성장 파트너 입지 유지</p> <p>[AIVERSE] AI 기술 기반 현실-가상공간 융합 비즈니스 성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독 서비스(T우주): 상품 확대 및 고객 경험 제고 메타버스 서비스 (ifland): 전 세계 49개국 진출, 글로벌 메타버스로 성장 (A.): 세계 최초 한국어 거대언어모델 기반 B2C 서비스 출시, 100만 가입자 돌파

- 해당 위험 및 기회가 사업모형에 미칠 수 있는 현재 및 미래의 영향 서술
- 지속가능성 위험 및 기회 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정량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 설정
- 앞서 공개한 목표에 대비하여 현재까지의 진척도 공개

- 신한지주는 중대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이슈를 위험 또는 기회로 분류하고, 해당 위험 및 기회가 사회, 환경, 기업 가치 및 재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공개함⁷⁾ (<그림 3> 참조)

<그림 3> 신한지주 중대 이슈 평가 및 분석 중 일부

No.	영역	1 중대 이슈 (Level 1)		2 Impact Materiality		3 Financial Materiality		4 Double Materiality	GRI 매칭	보고 위치	
		Impact Type		Impact	영향도	Impact	영향도	영향도			
3	상생 (Brave)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생태계 구축	Positive Impact	· 중소·혁신 기업, 소상공인, 금융소외계층 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여	심각성	●●○	·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기업 평판 및 브랜드 가치 향상	심각성	●○○	●●●	203-1, 413-1 P.55-75
			발생 가능성	●●○	발생 가능성	●●●					
		Negative Impact	· 중소·혁신 기업, 소상공인, 금융 소외계층의 금융접근성 악화	심각성	●○○	· 기업의 사회적 책임 미이행에 따른 기업 평판 및 브랜드 가치 하락	심각성	●○○			
		발생 가능성	●○○	발생 가능성	●○○						
4	고객 커뮤니케이션 및 만족도 향상	Positive Impact	· 디지털 전용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신상품 개발을 통한 금융소비자 가치 극대화	심각성	●○○	· 통합 데이터 플랫폼 기반의 고객 유치 확대 및 운영 효율성 증대	심각성	●●○	●○○	Non-GRI P.131-136	
			발생 가능성	●●○	발생 가능성	●●●					
		Negative Impact	· 시장과 고객 니즈에 부합하지 못한 상품·서비스 또는 디지털 소외계층 발생에 따른 고객 불편 및 불만족	심각성	●○○	· 고객 니즈와 시장 수요에 부합하지 않은 상품·서비스로 인한 시장지배력 약화	심각성	●●○			
		발생 가능성	●○○	발생 가능성	●○○						

- ① 중대성 평가 결과를 통해 도출된 중대 이슈의 위험 또는 기회 해당 여부를 표시
- ② 중대 이슈가 위험 및 기회로서 사회, 환경에 미치는 정성적 영향과 심각성 및 발생가능성에 따른 영향도 표시
- ③ 중대 이슈가 기업 가치 및 재무 성과에 미칠 수 있는 정성적 영향과 심각성 및 발생가능성에 따른 영향도 표시
- ④ 사회적, 환경적 영향과 기업 가치 및 재무 성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바탕으로 주요 위험 및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이슈를 우선순위화

7) 신한금융그룹, 2023, 신한금융그룹 2022 ESG 보고서 Special Report

○ 삼성SDI는 중요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또는 기회에 해당하는 중요 토픽과 해당 토픽이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근거에 대해 사업 특성을 반영해 설명하고 있으며, 사업영역과 가치사슬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및 영향의 정도를 보고함⁸⁾ (<그림 4> 참조)

<그림 4> 삼성SDI 중요성 평가 결과 중 일부

ESG 중요 토픽	식별 결과	주요 영향	영향 대상	영향 수준 ¹⁾		GRI Index	연관 중점영역	페이지
				사회/환경적 영향	재무적 영향			
배터리 순환경제 구축	긍정-실재	배터리 분해 및 재활용을 위한 효과적 설계와 회수된 재료를 재활용하는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통해 환경 영향을 경감하고 순환경제 생태계를 확산시킴	환경, 경제	●●●●●	●●●●●	301-2	선제적 기후행동	48-49p, 94p
온실가스 배출	부정-실재	별류체인 전반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부정적인 기후변화를 야기하며, 배출권 거래 등 규제에 대한 관리비용을 유발할 수 있음	환경, 경제	●●●●●	●●●●●	305-1-5	선제적 기후행동	40-42p, 45p, 93p
E 재생에너지 전환	긍정-실재	재생에너지 확대는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함과 동시에, 재생에너지 100% 전환을 요구하는 글로벌 선진 고객사 수주 및 거래관계 향상에 기여함	환경, 경제	●●●●●	●●●●●	302-1, 3	선제적 기후행동	42p, 47p
제품 전과정 환경영향 평가 (LCA) 및 저감	긍정-실재	제품 전 생애주기에서 발생하는 탄소 등 환경영향을 평가, 저감할 경우, EU 배터리 규제(안)에 대응하고 글로벌 자동차 OEM사 등 주요 고객사의 관련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음	환경, 경제	●●●●○	●●●●●	Non-GRI	선제적 기후행동	46p
에너지 효율 관리	긍정-실재	제조과정 전반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효율 향상은 운영 효율성과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환경, 경제	●●●●○	●●●●○	302-1, 3, 4	선제적 기후행동	42-44p, 93p

- ① 해당 이슈의 위험 혹은 기회 여부, 실재적 혹은 잠재적 이슈 여부를 설명
- ② 해당 이슈가 사업영역과 가치사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설명
- ③ 해당 이슈로 인해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가치사슬 내 영역 (사람/경제/환경)
- ④ 해당 이슈가 사회·환경 및 기업 재무 성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의 정도를 단계에 따라 구분

8) 삼성SDI,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23

- 현대자동차는 회사가 운영하는 사업의 특성과 관련 규제 동향 등 기업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여 중대 이슈를 도출하고, 중대 이슈의 관리 방향과 중장기 목표, 그에 따른 이행 실적,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이해관계자 등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하기 위한 전략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⁹⁾ (<그림 5> 참조)

<그림 5> 현대자동차 중요 이슈 관리 중 일부

1 중요 이슈	2 이슈 선정 배경	3 주요 활동 및 영향	4 영향의 원인				5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이해관계자				6 이슈 관리방향 및 이행 실적	7 중장기 목표 및 계획	보고서
			사업장	공급망	제품-서비스	환경	지역 사회	소비자	협력사				
친환경/전기차 전환 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국가별 자동차업체 대상 플릿 평균 CO₂ 배출량 규제 또는 연비규제 강화, 내연기관 차량 판매금지 정책 등으로 인한 친환경(전기차) 전환 가속화 차량 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CO₂ 배출량 감축에 대한 소비자 기대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동화 차량의 내연기관 차량 대비 CO₂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 58.1% 저감 (198억 원 저감효과) * 2018년 현대자동차 자체 연구 결과 기준 <p>↳ 친환경차량 사회적 비용 저감</p>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대자동차는 기존 내연기관 중심에서 전동화 포트폴리오로 전환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기술개발 및 차량 출시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탄소배출량이 높은 배스의 대형 트럭 같은 상용차는 2028년까지 전 차종 전동화 라인업을 구축하고, 2035년 한국시장을 중심으로 점차 타 지역까지 100% 전기차 전환을 추진할 것입니다. 2023년 이후에는 수소전기차 라인업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 2022년 전체 전동화 차량 506,793대 판매 - 2022년 전체 전기차 210,352대(아이오닉 5 98,583대) 판매 - 2022년 수소전기차 11,217대 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40년 주요 시장 100% 전기차 판매 2035년 유럽 시장 100% 전기차 판매 2030년 제네시스 브랜드 100% 전기차 전환 2030년 전기차 200만 대 판매 	P.28-31	
온실가스 저감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중요성 확대 유럽 탄소국경세(CBAM) 등 강력한 무역 규제 도입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회적 책임 요구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규제 대응 비용: 약 11.5억원 * 2022년 온실가스 배출 무상 할당량(약 146만 톤)을 초과 배출하여 발생한 구매비용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1년 9월 전동화, 수소사회, 스마트시티, 순환경제 생태계 구축을 골자로 하는 현대자동차의 2045년 탄소중립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현대자동차의 탄소중립은 원부자재 구매 조달, 차량의 설계-생산-판매, 차량의 사용-폐기 회수 등 가치사슬 전반의 온실가스 감축과 더불어, 가치사슬 외 사업운영에 필요한 부수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 및 상세 활동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RE100 이니셔티브 가입 및 로드맵 구축 - 현대자동차 탄소중립 로드맵 및 협력사 탄소중립 가이드라인 수립 - 2022년 제로, 2023년 인도네시아 공장 100% 재생에너지 전환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45년까지 가치사슬 전반의 탄소중립 실현 - 전동화 전환, 사업장 RE100 달성 및 공급망 탄소중립 유도 중점 추진 2045년까지 글로벌 전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전기에너지 100% 재생에너지 전환 - 2040년 글로벌 전 사업장 RE90 달성 목표 	P.25-27		
글로벌 기업가치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브랜드 경쟁력 확보 및 전 세계 판매량 증대를 통한 기업가치 향상 필요 모빌리티 마케터로서의 영역 확장을 위해 R&D 투자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력 향상을 통한 기업가치 향상을 위해 연구개발(R&D) 지속 지원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부문 R&D 투자 소비자 안전을 위한 제품 품질 강화 투자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2년 현대자동차는 지속적인 브랜드 강화와 품질 개선 등을 통해 글로벌 판매 3위에 올랐으며, 세계 1-6위 기업 중 유일하게 판매량이 성장하였습니다. 판매량뿐만 아니라 제네시스, SUV 등 고부가가치 차종 판매 비중을 확대하여 수익성을 개선하고 있으며, 2022년 Motor Trend 올해의 차(CAR 부문)에 G90이 선정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 2023년 총 R&D 투자 비용: 3조 5,268억 원 - 아이오닉 5, 독일 전문지 아우토 모토 온트 슈포르트(AMS) 전기차 비교평가 1위 - 2023 IIHS 안전성 평가 TSP 및 TSP+에 3개 차종 선정 - 2022년 총 R&D 투자 비용: 약 3조 3,405억 원 - 2017년부터 2023년 1분기까지 오픈 이노베이션 스타트업 투자액: 약 1조 3,285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커넥티드 카, 자율주행 등 소프트웨어 부문 2030년까지 12조 원 투자계획 (신사업 관련 기술 개발 4조 3,000억 원, 빅데이터 센터 구축 2조 9,000억 원, 오픈 이노베이션 4조 8,000억 원 등) 	P.6-7		

- 1 중대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이슈명
- 2 해당 이슈가 중요 이슈로 선정된 배경(사업 특성, 영위하는 산업의 규제 동향 등)
- 3 해당 이슈의 위험 및 기회에 따라 회사가 수행한 주요 활동과 그로 인한 재무적, 비재무적 영향
- 4 해당 이슈가 미치는 영향의 원인이 되는 가치사슬 내 영역 (사업장/공급망/제품 및 서비스)
- 5 해당 이슈로 인해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이해관계자 구분 (환경/지역사회/소비자/협력사)
- 6 해당 이슈를 관리하기 위한 회사의 관리 방향 및 최근까지의 이행 실적
- 7 해당 이슈를 관리하기 위한 중장기 목표 및 계획

9) 현대자동차, 2023, 2023 현대자동차 지속가능성보고서

지속가능성 위험 및 기회 공시 개선 필요사항

- IFRS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주요한 위험 및 기회 요인과 대응 방안 외에도 위험 및 기회 요인이 선정된 근거 즉, 사업모델과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함
 - 위험 및 기회 요인이 선정된 근거는 IFRS S1 기준에 따르면 일반적인 외부 환경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업모델이 포함된 산업과 사업영역, 가치사슬에 따라 고유의 특성을 고려해야 함

- 중요성 평가 과정에서 재무지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 및 기회 요인과 영향을 받는 재무지표를 선정하고 평가 결과 공개 시에는 단기, 중기, 장기와 같이 기간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공개해야 함
 - IFRS S1 기준에서는 재무적 영향에 대한 양적 정보를 공개하기 어려울 시, 합당한 사유와 함께 질적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 사회, 환경적 영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영역과 이해관계자에게 해당 위험 및 기회 요인이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 기술해야 함
 - 단순히 사회, 환경적 영향을 상·중·하의 단계로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1) 해당 영향이 주요하게 작용하는 사업영역, 지역, 이해관계자와 그 근거, 2)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 3) 가능한 경우 측정 가능한 지표를 활용하여 영향의 정도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중요성 이슈 혹은 위험 및 기회 요인 평가 및 선정 과정에서 ESG 전담 부서 뿐만 아니라 각 이슈 또는 요인과 관련된 현업 부서, 리스크 관리 담당 부서가 참여하여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이슈 또는 요인을 선정해야 함

Global News

1. 국제지속가능성인증기준 5000(ISSA 5000) 초안에 대한 의견 제출 현황과 시사점

양희원*

□ 서론 : ISSA 5000 개요, 연혁 및 주요 특징

- 국제지속가능성인증기준 5000(ISSA 5000; International Standards on Sustainability Assurance 5000)은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 International Auditing and Assurance Standards Board)에서 지속가능성 정보 및 문제에 대해 검증 의견을 제시하는 업무에 사용되던 ISAE 3000(International Standards on Assurance Engagement 3000)¹⁾을 포괄적으로 대체하기 위해 만든 지속가능성 검증 특화 기준임
- 2023년 8월 2일 IAASB는 ISSA 5000에 대한 공개 초안을 ED-5000(Exposure Draft-5000)이라는 이름으로 공개함²⁾
- 다수의 전문가는 장기적으로 ISSA 5000이 그간 지속가능성보고서 제3자검증에 주로 사용되던 AA1000³⁾과 ISAE 3000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그 확신 수준은 제한적 확신(Limited Assurance)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음⁴⁾
- 본 보고서는 2023년 12월 1일까지 IAASB가 주요 이해관계자*에게 받은 의견서 내용과 그 회신 내용을 분석하여 시사점과 함께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분석 목적상 주요 이해관계자는 4대 회계법인과 한·미·일 공인회계사협회로 함

□ 본론 1 : ISSA 5000 초안 의견 수렴 질문지 분석

- ISSA 5000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질문지는 총 3개 파트, 2개 영역, 17개 주제, 27개 질문으로 구성됨
- 이 중 동일 주제에 대해 2개 이상의 질문이 있는 주제는 “지속가능성 정보와 지속가능성 문제의 정의”, “업무 범위를 포함한 업무 상황에 대한 사전적 지식”, “기준의 적합성과 가용성”, “전문가 또는 다른 실무자의 작업물 사용”, “보고 요건 및 검증 보고서” 및 “기타 사항”으로 총 6개 주제임

* 한국ESG기준원 ESG평가실 선임연구원(미국회계사), hwyang@cgs.or.kr

1) ISSA 5000과 동일하게 IAASB에서 만든 검증 업무 수행에 대한 기준으로 국외에서 지속가능성보고서 제3자검증을 위해 많이 활용됨. 지속가능성에 대해 특화된 검증 기준이 아니라는 한계점이 있음

2) Proposed International Standard on Sustainability Assurance 5000 General Requirements for Sustainability Assurance Engagements and Proposed Conforming and Consequential Amendments to Other IAASB Standards, IAASB, (2023.08.02.)

3) AccountAbility라는 비영리단체에서 만든 지속가능성검증 기준으로 국내에서 지속가능성보고서 제3자검증을 위해 많이 활용됨. 해외에서는 잘 활용되지 않고 매뉴얼이 31페이지에 그치는 등 상대적으로 구성성이 떨어지는 한계점이 있음

4) “백태영 ISSB 위원, 국내 ESG 공시 인증 ‘IAASB 기준 채택 전망’”, ESG경제, (2023.11.08.)

[포럼] “ISSA 5000’ 제정·도입, 지속가능성 인증 품질 제고에 기여할 것”, 세정일보, (2023.11.03.)

〈ISSA 5000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질문지 구성 (번역본)〉

구분	구성
파트 (3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트 A : 응답자 세부 정보 및 인구통계학적 정보 • 파트 B : 초안에 대한 답변 (25개 질문) • 파트 C : 일반 의견 요청 (2개 질문)
영역 (2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역 1 : 전반적인 질문 • 영역 2 : 구체적인 질문
주제 (17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면 관계로 본 링크에 연동
질문 (27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면 관계로 본 링크에 연동

□ **본론 2 : 4대 회계법인의 의견 제출 현황 및 분석**

- 총 27개 문항에 대해 4대 회계법인은 모두 의견을 제출함. 다만, 모든 회계법인의 의견이 일치하는 질문은 16개(59.3%)이며, 나머지 11개 질문(40.7%)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림. 나아가 일반 의견을 제외한 파트 B의 25개 질문에 한정할 경우 모든 회계법인의 의견이 일치하는 질문은 14개로 56.0%에 불과함. 따라서 아직 ISSA 5000에 대한 의견이 합치되지 않은 상황으로 공론화 과정을 더 거칠 것으로 보임
- 4대 회계법인 내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주제는 아래와 같음

- ED-5000의 적용 가능성 및 ISAE 3410과의 관계
- 지속가능성 정보와 지속가능성 문제의 정의
- 제한적 확인과 합리적 확인의 구분
- 업무 범위를 포함한 업무 상황에 대한 사전적 지식
- 전문가 또는 다른 실무자의 작업물 사용
- 추정 및 미래 예측 정보
- 제한된 확인 업무를 위한 위험 관리 체계
- 그룹 및 "연결" 지속가능성 정보
- 보고 요건 및 검증 보고서
- 기타 사항

- 특히, 4대 회계법인 내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10가지 주제 중 “제한된 확인 업무를 위한 위험 관리 체계”, “보고 요건 및 검증보고서”, “기타 사항”을 제외한 7개 주제는 한·미·일 공인회계사협회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주제로 이해관계자 간 견해 차이가 상대적으로 큼

□ **본론 3 : 한·미·일 공인회계사협회의 의견 제출 현황 및 분석**

- 총 27개 문항에 대해 한·미·일 공인회계사협회는 모두 의견을 제출함. 다만, 모든 공인회계사협회의 의견이 일치하는 질문은 14개(51.9%)이며, 나머지 13개 질문(48.1%)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림. 나아가 파트 C의 일반 의견을 제외한 파트 B의 25개 질문에 한정할 경우 모든 공인회계사협회의 의견이 일치하는 질문은 12개로 48.0%에 불과함. 따라서

아직 ISSA 5000에 대한 의견이 합치되지 않은 상황으로 공론화 과정을 더 거칠 것으로 보임

- 한·미·일 공인회계사협회 내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주제는 아래와 같음

- ED-5000의 적용 가능성 및 ISAE 3410과의 관계
- 관련한 윤리적 요구사항 및 품질 관리 기준
- 지속가능성 정보와 지속가능성 문제의 정의
- 제한적 확인과 합리적 확신의 구분
- 업무 범위를 포함한 업무 상황에 대한 사전적 지식
- 기준의 적합성과 가용성
- 대상의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이해
- 전문가 또는 다른 실무자의 작업물 사용
- 추정 및 미래 예측 정보
- 그룹 및 "연결" 지속가능성 정보
- 사기
-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 특히, 한·미·일 공인회계사협회 내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13가지 주제 중 “ 관련한 윤리적 요구사항 및 품질 관리 기준”, “기준의 적합성과 가용성”, “대상의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이해”, “사기”,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제외한 7개 주제는 4대 회계법인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주제로 이해관계자 간 견해 차이가 상대적으로 큼

□ 시사점 : 이해관계자들 간 견해 차이가 심한 주제에 대한 ISSA 5000 기준 변동 주목 필요

- ISSA 5000은 지속가능성 검증에 특화된 국제기준으로 구체적이면서 범용성이 높아 향후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초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 견해차가 커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한편 변동사항이 어떻게 정해지더라도 앞으로 기업에 현재 지속가능성보고서 제3자검증의 수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요구되게 될 것은 명약관화함
- 따라서 기업은 위 분석에서 파악된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협회의 견해가 갈리는 아래 7가지 주제에 대한 IAASB의 대응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음. 더불어, 그 외의 주제에 대해서도 변화 추이에 따라 지속가능성 정보 및 문제에 대해 제3자검증 요건이 강화되는 것을 대비하여야 하겠음

- ED-5000의 적용 가능성 및 ISAE 3410과의 관계
- 지속가능성 정보와 지속가능성 문제의 정의
- 제한적 확인과 합리적 확신의 구분
- 업무 범위를 포함한 업무 상황에 대한 사전적 지식
- 전문가 또는 다른 실무자의 작업물 사용
- 추정 및 미래 예측 정보
- 그룹 및 "연결" 지속가능성 정보

Global News

2. EU 이사회, 강제노동 결부상품 역내 진출 금지 법안 채택

최두진*

- EU 이사회(European Council)가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 발의된 강제노동 결부상품 역내 진출 금지 법안에 대한 협의안을 채택함에¹⁾ 따라 EU 3대 입법기관의 협상안이 모두 확정됨
- EU 의회(European Parliament)는 앞선 2023년 11월, 해당 법안에 대한 입장을 확정함²⁾
 - EU 의회 국제통상위원회 (International Trade mark Association, INTA)와 내부시장위원회 (Internal Market and Consumer Protection Committee, IMCO)는 2023년 10월, 찬성 66표, 반대 0표, 기권 10표로 법안을 채택했으며, 이후 11월 본 회의에서 EU 의회 입장으로 확정됨
- EU 이사회는 이번 협의안에서 ▲원격 판매, 온라인 판매에 대한 규제 범위의 명료화 ▲강제노동 관련 전문 인터넷 포털 사이트 개설 ▲현장 조사를 포함한 집행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제시함
- 협의안 주요 내용 I : 규제 범위의 명료화
 - 온라인 판매를 포함한 원격 판매행위 일체를 ‘취급 행위’로 간주했던 기존 법안을 구체화해 case-by-case 분석이 필요함을 제시함
 - 온라인 판매 및 원격 판매의 경우, 단순히 온라인 스토어의 인터페이스가 EU 회원국에서 접근 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론 이를 ‘취급 행위’로 간주할 수 없음을 명시
 - 제품의 배송 가능 지역, 판매 링크에서 사용되는 언어, 결제 수단, 취급 통화, 도메인 주소 등 연관성 높은 요인들을 고려해야 하며, 역내 시장을 최종 사용자(end-users)로 의도한 경우에만 규제 대상으로 한정
- 협의안 주요 내용 II : 강제노동 담당 전문 인터넷 포털 사이트 개설
 - 모든 회원국의 공용어로 구성된 단일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운영해 강제노동 관련 정보의 빠른 제출 및 접근을 유도
 - 강제노동 결부상품을 취급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모든 주체(자연인 및 법인)는 포털에 정보를 제출하고 관할 당국의 조사 결과를 전달받도록 함

* 한국ESG기준원 ESG평가실 연구원, doojin.choi@cgs.or.kr

1) European Council, 2024.01.26., “Forced labour: Council adopts position to ban products made with forced labour on the EU market”

2) European Parliament, 2023.11.24. “Proposal for a ban on goods made using forced labour”

- 특히 집행위는 위 포털에 인권 실사(Human Right Due Diligence) 및 공급망 실사(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관련 웹사이트 링크 병기를 유도하는 등, 인권/공급망 실사 관련 통합 정보 채널 구축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음

□ 협의안 주요 내용 III : 집행위원회 역할 강화

- 주 관할 당국(Lead Competent Authority) 역할 수행, 제3국에 대한 조사 협조 요청, 최종 결정 등 강제노동에 대한 집행위의 역할을 명문화해 책임 부여
 - 직접 조사 : EU 단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경우 혹은 강제 노동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의심되는 경우, 집행위는 직접 주 관할 당국으로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음
 - 조사 요청 : 강제노동이 제3국 영토에서 자행될 경우, 집행위는 제3국 정부에 현장 조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최종 결정 : 집행위는 주 관할 당국으로부터 강제 노동 의심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은 이후, 해당 제품의 강제 노동 결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그에 맞는 처분 (판매 금지 혹은 무혐의 사실 공지 등)을 이행해야 하며, 이는 입증에 대한 책임이 기업이 아닌, 집행위에 있음을 암시함
- 다만, EU 의회는 앞선 수정안에서 고위험 지역, 품목에 대한 입증 책임을 기업이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³⁾했음
- EU 집행위 발의안 원안의 '5조 3항 및 6항에 부합하는 자료를 수집할 수 없다면 (경제 행위자의 비협조 등으로 인한 자료 미비) 권한 당국은 이용가능한 다른 증거(any other facts available)를 통해 강제노동 결부를 입증할 수 있다'는 조항⁴⁾ 역시, 집행위의 입증 책임과 별개로 결국 기업의 적극적 협조를 유도한다는 의견이 있음⁵⁾
- 이번 이사회 합의안이 해당 조항을 승계함에 따라⁶⁾, EU 입법 3대 기관 모두 기업에 책임을 부여하거나 성실한 참여를 유도하는 입장을 채택하게 됨

3) 한국무역협회(2024), 글로벌 공급망에 켜진 또 다른 경고등-강제노동 규제 동향과 우리 기업 대응방안, p. 6.

4) EU 집행위원회 발의안, 제6조 제2항

5) 이천기(2023), EU의 강제노동 결부상품 규제 현황과 시사점, p. 52.

6) EU 이사회 합의안, 제20조 제2항